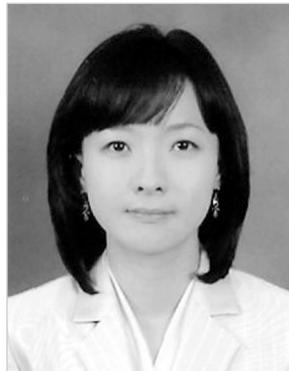


4월의 악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최 윤 진 농수축산신문 기자



더 이상의 AI를 막아라!

지난 2008년 봄, 겨울에만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고병원성 AI가 국내 전역을 휩쓸면서 가금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다시 겨울이 되면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농가 및 가금산업 관계자들은 겨울철새와 고병원성 AI에 대한 공포가 함께 오고 있다고 말한다.

아직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고병원성 AI의 발생원인으로 겨울철새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요즘 가금산업 관계자들은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때지만 정부는 물론 농가도 그 어느 때보다 고병원성 AI 재발방지에 열심을 내고 있어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긴장감 속 차단방역에 열의

지난 4월 봄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우리에게 상시방역체계구축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정부는 뒤늦게나마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예찰 및 소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분기별로 AI 정기 검사, 가든형 식당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임의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또 북방 철새가 한반도에 머무는 10~11월 뿐 아니라 동남아로부터 북쪽으로 돌아가다 잠시 들르는 3~4월에도 철새·텃새를 잡아 혈청과 분변을 검사하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와 가축방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과는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2008년도 AI 재발방지를 위한 가금농가교육’을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했다.

교육에 참가했던 김의겸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충남천안지부장은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 되는 닭, 오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바이러스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농가들이 AI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혹시 나 때문에 주위 농장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교육을 받은 내용대로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철새가 오는 지역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주의사항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한 농장주들의 방역의식은 미흡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농장위주로만 방역대책을 세우다 보니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실천은 하지 않는 농가가 여전히 존재한

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차단방역에 소홀한 농장들은 병원체를 키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4월 AI 발생 피해액 6,324억

한 농가를 음독 자살시도까지 몰아 넣었던 2008년 봄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을 휩쓴 고병원성 AI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6,324억원으로 추정됐다.

2003년에 발생했던 AI로 입은 피해가 1,126 억원, 2006년 AI로 528억원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닭·오리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가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해 2,719억원, 사료업계의 영업 이익 감소 피해는 30억원이었다.

육가공·유통단계의 경제 피해는 5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소비자판매 단계에도 3,142억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

닭·오리 취급 식당 등의 매출액 감소도 심각해 2,71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AI 발생 기간 동안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은 4월 20%, 5월 40%에 달했다.

고병원성 AI는 겨울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이닥쳤던 탓에 전국이 AI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피해가 큰 만큼 오리 농가는 여전히 AI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양계농가는

이제야 AI의 여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올 겨울 발생하면 '상습발생국'

지난 4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과학기술계 학자는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토착화 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올 겨울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는 베트남과 중국 등처럼 '고병원성 AI 상습발생국' 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4월까지 AI가 발생했던 터라 AI 청정지역이란 지위를 유지하고 가금산업의 침체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올 겨울 발생하면 자칫 매해 겨울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국가로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며 "이번 겨울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 지자체에서는 농가들의 차단방역 협조는 물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농가·관련정부, 단체 협력 절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지난 10월 27일 정부는 AI 방역 가상훈련을 실시해 유관기관의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위기 상황이 왔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방

역 태세를 갖추기 위한 초동방역 경진대회를 열기도 했다. 또 지난 11월 13일부터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전국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AI 예찰활동 및 차단방역 강화 등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 방문금지, 출입차량 및 방문객 출입통제,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 등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차단방역 홍보하고 지도·점검한다.

또 태국 등 AI 발생국가 여행객에 대한 탐지 견을 집중 투입해 휴대물품 검색을 강화하고 신발소독 및 국경검역도 한층 강화된다.

대한양계협회에서도 전체 농가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장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 신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병원성 AI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철새 이동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살처분 범위 설정, 예찰 및 신고의 정확한 기준 부재 등 AI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태국에서 지난 11월 1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국내에 겨울철새도 이미 도래하고 있다.

양계농가는 물론 전체 가금산업 관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I로 같은 피해를 반복해 겪지 않기 위해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와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조사에 의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양계**